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 6대분야 550조 민간투자

국가 첨단산업 육성전략

12대 전략기술 연구개발에 25조
최첨단 생산시설 마더팩토리 설립
시스템 반도체 300조 민간투자
용인에 세계 최대 클러스터 조성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바차를 가한다. 상대적 경쟁력을 보유한 이들 6대 핵심 산업에 대해 2026년까지 민간 주도로 550조원 규모 집중 투자를 유도하고, 정부는 종합 육성 전략을 마련해 지원한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 육성을 위해 경기도 용인에 300조원 규모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도 신규로 조성한다. 이는 단일 단지 기준 세계 최대 규모다. 신규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흥 등 기존 생산단지와 연계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보고하고 첨단산업 초강대국 도약을 위한 6대 핵심과제와 첨단산업별 육성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관련기사 2·3면〉

이번 육성전략은 정부가 첨단산업이 국가와 기업의 성장 엔진이자, 경제안보를 위한 전략 자산으로 판단하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정부는 △초격차 기술력 확보 △혁신인재 양성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튼튼한 생태계 구축 △투자특구(投資特區) △통상역량 강화 등 6대 국가 총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력 지원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우리 강점인 제조역량을 바탕으로 초격차 기술력 확보에 나선다. 벨기에 소재 반도체 연구·인력양성센터(IMEC·아이맥)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아이맥’을 구축, 양자와 인공지능(AI)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에 5년간 총 25조원을 투입한다.

튼튼한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최첨단 기술과 설비를 갖춘 핵심 생산시설인 마더팩토리(Mother Factory)를 국내에 설립하고,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양산 공장을 조성하는 전략도 추진한다. 핵심 소부장의 국내 생산 확대와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는 ‘산업공급망 3050’ 전략도 수립키로 했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

2042년까지 민간투자 300조원 규모로 단일 단지 기준 세계 최대 규모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 용인에 조성한다. 클러스터에 첨단반도체 제조 공장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 우수 소부장, 팹리스기업 등 최대 150개를 유치한다. 신규 클러스터는 기존 기흥·화성·평택·이천 등 생산단지, 인근 소부장 기업 등과 연계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투자세액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전력 등 필수 인프라 구축에 올해 1000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또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인허가 제도를 대폭 개선해 경쟁국 수준으로 낮추고, 국내외 중장기 전략투자자

수행할 ‘국가투자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와 유럽연합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자국 우선주의에 대응해 우리 산업의 부담 최소화과 수혜 극대화를 추진, 주요 기업, 전문가 등과 소통하며 적극 협상에 임하기로 했다. 첨단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도 추진해 사각지대도 보완한다.

혁신을 주도할 핵심인재 확보를 위해 이공계 우수 인재를 선발해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산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추진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대중교통 마스크 20일부터 벗는다

오는 20일부터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정부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실내 마스크 완전 해제,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해제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20일부터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 개방형 약국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2020년 10월 도입 이후 2년 5개월여 만에 사라지게 됐다.

대형마트 등 대형시설 내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일반 약국과 의료기관, 감염 취약시설 등에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당분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2020년 10월 도입 후 2년 5개월만 일반약국·의료기관 등은 착용 유지 혼잡 시간대 이용자는 착용 적극 권고

한 2차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지만 혼잡 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분들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만1899명 발생하며 전일(1만1401명)보다 498명 늘었다. 하지만 1주 전 지난 8일(1만2791명)보다 892명 감소했으며, 수요일 기준으로 37주 만에 가장 적은 수를 기록했다.

한 2차장은 “지난 1월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일 평균 확진자는 38%, 신규 위증증 환자는 55% 감소했다”면서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는 등 방역상황은 안정적”이라고 추가 완화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완전 해제,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등 방역조치별 완화 계획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친 뒤 이달 말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 2차장은 “정부는 고위험군 대상 추가 접종률과 치료제 처방률을 높여 중증 화물과 치명률을 최소화해 나가고 ‘코로나19 일상 회복 로드맵’도 차질 없이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VB 사태에 화들짝... 금융당국, ‘예금전액 보호’ 검토

정부 지급 보장 근거·절차 점검 예금보호제도 확대 방안도 논의

금융당국이 은행의 영업정지, 파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예금 전액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앞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은 18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봤다는 공시를 낸 지 36시간 만에 디지털 뱅크런으로 파산을 맞았다. 유사상황 발생시 자금 인출 필요성을 낮춰 파산으로 직결되는 경우를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관련기사 4면〉

15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등은 뱅크런(대량 인출 사태) 발생시 금융회사의 예금전액을 정부가 지급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1일 실리콘밸리은행(SVB)은 손실 공시 이후 36시간 만에 디지털 뱅크런으로 파산했다. 이에 대해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지난 13일부터 예금전액에 대해 지급 보증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실리콘밸리은행의 예금 96%는 보장 상한액이 25만달러를 넘었다. 예금을 전액 지급 보증하기로 하면서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를 방지했다는 분석이다.

◆예금전액 지급보장 방안 검토

금융당국은 예금전액을 정부가 지급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와 시행절차를 살펴보고 있다. 초기 뱅크런이 일어날 당시 예금전액 지급보장을 통해 파산으로 넘어가는 경우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사의 부실이 확대되자 1997년 11월 19일부터 2000년 말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예금전액을 보장하는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도덕적 해이 논란에 휩싸여 1998년

7월 조기 종료됐다.

예금보호제도 확대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은행 등 금융사가 영업정지,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줄 수 없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예금보호한도는 23년째 동결된 금액으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이 반영되지 않았다. 미국의 예금보호한도는 25만달러(약 3억2000만원), 독일은 10만유로(약 1억3800만원)다.

〈8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대통령실 “정상 만찬은 한 번만...정상 간 친교 시간 더 가질 것” /사진 뉴시스
▲ 민주당 “여당에 지지율 앞서... 단일대오로 맞선 결과

▲ 이개호 민주공천TF 단장, 이재명 ‘자진사퇴론’에 “사실에 가까운 얘기”
▲ 이재명, 김재원·김광동 ‘5·18 망언’에 “日극우와 차이 없어”



▲ 민주당, ‘尹-기시다’ 정상회담에 “조공보따리·굴종외교·친일세력” 맹공
▲ 김기현 “주 69시간은 너무 과도...여론 수렴 뒤 결정” /사진 뉴시스